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 의 변화*

이정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 글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43배에 이르고 1978년 이래 남한의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을 연속적으로 초과하여 현재 약 3배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상대국의 군사력과 군사위협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부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과 안보정책의 수립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평가하고 또한 남한의 군사력과 상대적 평가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 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 우위가 내부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이상 과도한 군비증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위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북한의 군사력, 대남 군사위협, 남북한 군사비 지출, 재래식 군사력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065). 또한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1. 서론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3.8조 원으로 1,441.1조 원인 남한의 4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 또한 1인당 GNI는 137.9만 원으로 2,869.5만 원인 한국의 21분의 1 수준이다. 또한 20여 년에 걸친 핵개발 노력으로 미국을 위협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경제제재를 겪고 있다. 경제제재의 대상에는 첨단 군사력 증강을 위한 부품·기술 및 완제품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²⁾ 한편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불리하며, 전쟁이 나면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³⁾ 위의 논의들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43배 잘사는 남한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국제정치학에서

1)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4년 6월 28일.

2) 미국은 2014년 6월 20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였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14년 6월 23일. 이러한 조치는 2008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면서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행정명령 13466호와,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핵 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에 따라 2010년 시행한 확대 제재 조치인 행정명령 13551호, 또 이들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11년에 발표한 행정명령 13570호가 적용된다. 『미국의 소리』,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941917.html>(검색일: 2014년 6월 23일).

3) 2013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부장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답변했다. 『동아일보』, 2013년 11월 6일.

힘(power)을 기반으로 국가의 행동과 전쟁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현실주의 접근 방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험적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명목 수치상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GNI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정밀한 평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수치가 꼭 명확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수치가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간부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개인의 주장이기를 바라지만, 사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이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군 지도부의 대북 열등감이 군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해묵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성찰을 다시금 분석하도록 강요한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두려워하고 과대평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상식적·객관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과대 인식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군비 경쟁의 늪으로 나아가는 양상이다.⁴⁾

이 글은 2014년 현재 북한 군사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과연 적절

4) 사실 북한 군사력의 과대평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국가정보원이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얻은 보고서에도 한국이 북한에 비해 10% 정도 우세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신동아』, 3월호(2010, 통권 606호).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국방부의 입장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설명한 후, 남북한 군사비 지출과 경제력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의 군사위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필자의 분석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한국 국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2.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⁵⁾

1)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인식

어느 국제정치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북한이라는 행위자를 일반적 사례를 벗어나는 특수한 분석 단위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가공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⁶⁾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1991~2013년 동안

5) 2장에서 다루어지는 이론적 내용들은 군사력 평가 방법에 대한 필자의 이론적 정리로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6)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1957~1961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9%에 이르며, 1971~1975년 기간에도 10.4%라는 가파른 성장을 하였다.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Washington D.C.: GPO, 1988) 참조.

<표 1> 탈냉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성장률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률	1.2	1.8	2.2	3.8	-1.1	-2.3	3.7	-0.9	-0.5	0.8	1.3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각 연도) 참조.

연평균 -0.37%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13년 1.1% 성장을 비롯하여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1.1%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한의 연평균 3.0% 성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⁷⁾

탈냉전 시기에 들어 북한 경제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파국의 양상을 보였다. 국제사회주의의 붕괴는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가중시킴으로써 내적 모순과 함께 위기의 국면으로 나타났다.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이후 다소 경제발전의 기초를 보이는 듯하지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남한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 지도부는 체제 안정 및 결속을 위해 ‘선군’을 강조하면서 자원 배분에서 왜곡 현상이 심각해졌다. 북한의 경제 현실은 선행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이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집중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생산요소와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 언제라도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동원되면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변질되었다.⁸⁾ 결국 북한 경제는 외형적으로

7) 남한의 2011~2013년 경제성장률은 3.7%, 2.3%, 3.0%이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4년 6월 28일.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다소 확장된 면모를 보이지만 경제 구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경제력은 1948년 북한 정권의 출범 이후 대남 경쟁력을 상당 기간 확보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여 탈냉전 시기 들어 비교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김정은 시대의 공식 출범 이후에도 상대적·절대적인 측면 모두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즉 국민소득과 대외무역의 절대 규모는 다소 팽창했으나 상대적인 규모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빈부 격차는 확대되었고, 대외무역의 수출상품 구조 및 교역상대국 구조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 장악력 및 정치 외교력과 같은 부문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미국 CIA의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총체적인 국력 지수는 남한의 5%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⁹⁾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거의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게 존재한다. 그러나 잠재적인 군사력 및 전쟁수행 능력을 담보하는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약 43배 벌어진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불안함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간과해도 될 수준으로 낮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분석이 아니다. 다만, 북한의 군사위협을 1970년대의 시각에 멈춰놓고 고정불변의 상수로 그

8)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47~49쪽.

9) 2015년 남한의 국력 지수는 2.07인 데 비해 북한은 0.11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CIA의 “국력지수 전망,”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아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서울: 오름, 2006), 75쪽에서 재인용.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말한다.

2) 북한 군사력의 평가

현재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하나는 남북한 간 경제력에서 약 43배(2013년 기준)의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사실상 매우 낮아졌다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 열세라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북한의 군사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후자의 주장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군의 장비 성능과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실제 전투를 하지 않는 경우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총체적인 군사비 지출의 비교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¹⁰⁾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사비의 막대함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현재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의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사용하였는지를 보아도 국방부 스스로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는 것을 명확히 상정한 바 있다.¹¹⁾ 남한이 군사비 지출 구조

10) 정확하게는 ‘군사비 투자 누계(累計)’로 설명할 수 있다. 특정 연도의 군사비 비교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군사비 총합이 현재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군사비 투자 누계가 군사력을 평가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척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제1호(1997), 51쪽 참조.

가 특별하게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면 남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남북한 군사비 지출 추세를 비교해보면 북한은 남한의 추월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¹²⁾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남북한 간 군사비 지출의 불균형에 위기를 느낀 북한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경제적’ 방어기제라고 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이미 재래식 군사력 차원에서 남한과의 경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¹³⁾ 과거로 거슬러 살펴보면, 1980년대 초까지 대등한 수준이던 남북한 간의 군사비 지출은 1990년 들어 이미 2배의 차이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3~4배 격차를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국이 열세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정적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투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라고 주장한다면, 문제는 북한의 군사력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군의 운영체계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북한 군사력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 속에서 남북한 군사비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된다.¹⁴⁾ 그러나 북한 군사력 우위론자들은 여

11) 국방부, 『IMF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서울: 국방부, 1998), 36쪽.

12)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낮은 가격에 무기를 조달한다는 ‘군수산업 가격 우위론’ 또는 ‘실질구매력 우위론’에 따라 단순 비교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13)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116~124쪽 참조.

14)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군사력 평가 방법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 북한 군사력 우위론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한다.

먼저 대표적인 군사력 비교 방식으로 단순 개수 비교 방법이 있다. 국방부가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홍보’해 온 방식은 남북한의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 수를 이른바 ‘날알세기(bean counting)’하는 ‘단순 개수 비교’다. 이 방법은 수치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적인 차이가 곧 군사력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수행한 이라크전 등 지난 수차례의 침단전쟁을 볼 때 병력과 장비의 양적 비교가 현대전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군의 침단 장비는 대규모의 이라크 수비대를 단기간에 무력화 시켰다. 따라서 단순 개수 비교는 군사력에 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주요 이유로는 ① 병력과 무기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개수 비교가 모든 양적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③ 개수 비교는 매우 중요한 조직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④ 개수 비교는 다양한 범주의 단위 부대와 무기체제가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⁵⁾

둘째, 전력 지수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다. 이는 특정 부대 또는 무기를 기준으로 지수(index)를 정하여 각 무기의 상대적인 전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2), 40쪽;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51쪽.
15)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의 고찰,” 31~40쪽;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45쪽 참조.

2004년까지도 남한이 북한의 88%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10%로 평가되었다.¹⁶⁾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의 ‘무기효과지수 / 무기의 부대가중치(WEI/WUV-Ⅲ)’를 이용한 전력 평가에는 전력 지수의 평가 및 적용과 관련해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① 전력 지수를 통한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단순 화력(sheer firepower)’에 대한 평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¹⁷⁾ ② 전력 지수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수치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WEI / WUV-Ⅲ의 경우도 소련제 무기들을 다소 과대평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전력 지수 방법으로 이용하는 WEI 지수가 북한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¹⁸⁾ ③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지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WEI / WUV-Ⅲ가 1979년에 유럽 지역 무기들의 지수를 원용하여 추산한 결과의 지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1980~1990년대 이후 급속히 개량된 한국군 보유 무기의 전력 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셋째, 동태적 방법으로서 ‘위게임(War Game)’ 방식을 들 수 있다. 앞서의 군사력 평가 방법들은 정적인 상태에서 군사력을 비교하는, 즉 정태적 방법들이다. 이에 비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전쟁 참여국의

16)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498쪽; 『한겨레』, 2013년 11월 7일.

17) 예를 들어 기갑사단등가치(Armored Division Equivalent: ADE) 화력 점수는 가용 포탄, 병참보급, 훈련, 통신, 사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Barry R. Posen, “Mea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al Bala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 (1984/85), p. 58.

18)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55쪽.

19)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5쪽.

군사력이 어떻게 발휘될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위게임으로 잘 알려진 동태적 군사력 비교이다. 대다수의 동태적 군사력 비교 방법은 ‘란체스터(Lanchester) 기하급수 모델’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둔다.²⁰⁾ 단순히 설명하자면, 동태적 비교는 전쟁 참여국의 군사력을 ‘화력×기동력×정보력’으로 계량화하여 그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역시 기술적 진보와는 별개로 분석에 필요한 대입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복잡해지고 명쾌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을지연습과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등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위게임을 동시에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남북한 위게임은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전투모의실(CBS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상 전투를 치르며 상황을 분석한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동태적 평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한 반도는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²¹⁾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남침뿐 아니라 북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재 남한의 방어력 수준은 공간 대비 병력의 비율(force-to-space ratios)에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힘들다. 기습의 승수효과는 최고 3~5배로 평가되기 때문에²²⁾ 북한이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

20)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368쪽.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위게임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위게임에서 운영된 시나리오가 한미연합작전에 적용되므로 기밀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21) Micheal O'Hanlon,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Spring 1998), pp. 135~170.

22)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369쪽.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은 대부분 즉각적으로 탐지되는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기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작은 공간에 뻘뻘한 방어선(dense defenses)을 구축하고 우월한 군사 장비를 갖춘 남한은 지형적 유리함으로 충분히 북한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실제로 남북한 군사력을 위계임을 통해 비교한 경우를 보면,²⁴⁾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단정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의 선제 기습 공격은 실패할 것이고, 전차전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수부대의 생존 가능성도 낮고, 핵·미사일의 전략적 효율성은 떨어지며, 특히 항공력은 남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학자들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의 군사력은 절대적 위협이 되기는 하나 남한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 방어를 목표로 할 때 북한의 군사력은 충분히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일방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남북한은 각자 상대에 대해 충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억제력을 발휘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²⁵⁾

마지막으로 군사비 투자 누계 방법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국의 군사능력 측정에 군사비 투자 누계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²⁶⁾ 국방비는 요소 비용의 측면에서 인적·

23)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Nick Beldecos and Eric Heginbotham,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Korea," *Breakthrough* (Spring, 1995), 1~8쪽 참조.

24) 이하의 논의는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376~404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25) 동태적 평가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 99~102쪽 참조.

26)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40, 51쪽.

물적·조직적 구성 요소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비를 운영하는 능력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 그 비용을 사용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특별하게 군비 경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누계하면 양자의 군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예산 편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국방부는 “1996년 현재 북한의 누계액은 618.1억 달러인 데 비해서, 한국의 누계액은 567.9억 달러에 불과하다”²⁷⁾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더라도,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이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14년 현재 군사비 투자 누계액에서 남한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2012년 기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이 약 93억 달러, 남한이 295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만 비교해도 20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²⁸⁾

한국전쟁 이후 정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계산한 결과 2008년까지의 남한 군사비 누계액은 3,692.8억 달러이며, 북한은 1,638.07억 달러 정도이다. 이미 6년 전에 누계상 2,000억

27) 국방부, 『IMF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 36쪽. 그런데 이 수치는 필자가 계량적 자료를 이용해 일일이 계산한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필자의 계산으로는 1996년 기준으로 남한의 누계는 1만 5,322억 달러이고 북한은 96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떤 통계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계량적 자료에 대해서는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 105~116쪽 참조. 한편 당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1998년에 이미 북한 13억 4,300만 달러, 남한 123억 9,800만 달러로 9배에 달하는 군사비 격차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SIPRI Yearbook 2003*, p. 348.

28) 이 글 <표 2>의 수치 참조.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후 해마다 170~180억 달러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²⁹⁾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남북한의 군사비 누계액은 북한이 약 2,000억 달러이고, 남한이 5,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³⁰⁾ 이러한 주장은 외부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연도별 군사비 지출을 볼 때에도 국방부가 인정하듯이, 1976년부터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³¹⁾ 이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는 경제력 차이에 따라 더욱 벌어지게 된다. 한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고 못한다. 군사비 통계 수치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IISS와 한국 국방부의 통계³²⁾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1985년도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군사비 투자 누계 방법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군수산업 가격 우위론 또는 실질구매력 우위론인데, 북한의 무기 구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29) 이정우,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JPI 정책포럼』, 128권 (2013), 7쪽(<http://www.jpi.or.kr/contents/?mid=KR1710>, 검색일: 2014년 5월 27일).

30) 위의 글, 7쪽.

31)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136쪽.

32) 국방부에서 말하는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의 일반회계예산에 불과하다. 실질적 의미의 국방비에는 경찰청 소관의 전투경찰비와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비, 그리고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 소관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연구개발비도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른바 ‘NATO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국방비는 실제로 더 큰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NATO 방식에 따른 군사비 산출에는 전시에 무장하여 군의 지휘하에 작전이 가능한 모든 무장력 — 심지어 세관원까지 포함 — 에 소요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NATO 방식의 군사비 산출에는 ① 운영비(operating costs), ② 조달 및 건설비(procurement and construction), ③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R&D), ④ 기타 지출(other expenditure) 등 크게 4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주장이 존재한다.³³⁾ 그러나 북한 군사력 우위론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실질 구매력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높다 하더라도 이 또한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북한의 구매력을 높게 상정하더라도 현재 남북한의 군사비 누계는 남한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⁵⁾ 또한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져왔는지도 의문이다. 군사비가 1985년도 수준에서 정체해온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무기의 획득과 같은 전력 증강이 한계에 달해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³⁶⁾

3. 북한 군사위협 능력의 평가

위에서 북한 군사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러 평가 방법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 개수 비교 방법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한눈에 군사

33) 국방부는 한국의 경우 K-1전차 1대 구매 가격이 23억 원인 데 비하여 북한의 T-62전차 구매 가격은 7억 원이며, 또 한국의 F-16전투기 가격은 4,300만 달러인 반면 북한의 MIG-29 가격은 2,200만 달러로 구매력 면에서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58쪽.

34)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의 논의를 참조.

35)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 118~119쪽.

36) 실제로 북한은 단지 장사정포(다연장 로켓포)를 늘여 대남 억지력 및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려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을 뿐,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돌입한 이후 전반적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468~471쪽 참조. 또한 통계적으로 완벽한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군사비에 연동되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서울: 대영문화사, 2007) 참조.

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군사력의 질적 고려를 전혀 무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력 지수에 따른 평가와 위계임 방식은 과학적으로 향상된 방법이기기는 하나 지수 산정에서의 작위성과 변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오히려 비교의 객관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사비 투자 누계 방식이 군사력을 평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군사력 구축을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로 군사비 투자이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 대비 군사력 구축 효율이 비슷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우 그 효율의 차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부터 다음의 분석이 시작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원을 기준 단위로 하여 2008년에 713억 원(4.08% 증가), 2009년에 763억 원(7.01% 증가), 2010년에 826억 원(8.25% 증가), 2011년에 898억 원(8.71% 증가), 2012년에 988억 원(10.02% 증가)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⁷⁾ 이 절에서는 국력 측정의 기본인 남북한의 경제지표와 군사비 지출을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통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능력, 수준, 지표를 분석해보기로 한다.³⁸⁾ <표 2>

37) 이러한 수치는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IPRI Yearbook 2013*에 의한 것으로, 그 정확성은 알 수 없고 단지 추정치일 뿐이나,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38)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통계 수치가 다소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각 기관별로 발표한 북한 관련 수치, 특히 국민총생산과 군사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추이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계 수치의 정밀성보다는 그 추이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였음을 밝힌다. 여

는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을 군사비 지출의 명목 비용을 통해 알아본 것이고, <표 3>은 북한의 군비획득 비용을 남한의 2분의 1로 계상,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남한의 2배로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단, 여기에서 외부로 공표되지 않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 수준은 2004년 이후 GNI의 27%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군사비 투자 추이가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위협으로 나타나는 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절대적 수치에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 열세인 것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비 지출 비교를 통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능력’과 군사위협 ‘수준’ 그리고 ‘지표’를 통한 군사위협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잠재적인 대남 군사위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투여되는 군사비와 전쟁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경제력의 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남북한의 군사비 비율과 경제력 비율을 곱할 경우, 양측 면에서 북한이 남한과 대등한 수준일 때 ‘1’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수치가 ‘1’이 넘으면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당한 것이고 ‘1’보다 낮으면 군사위협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48%) 군사비 지출이 두 배 이상(2.65배)이 되면 북한의 군사위협 능력은 1.28로 군사위협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2>의 1968

기에서 사용하는 통계 수치는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1998~1997)과 1997년 이후의 수치는 한국은행, 국방부, 통일부, 통계청, *Military Balance* 각 연도 및 CIA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또한 2009~2012년 북한의 군사비는 *SIPRI Yearbook 2013*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기반으로 그 증가율을 기존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표 2>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평가

연도	남북한 군사비 비교 (북/남)	남북한 경제력 비교 (북/남)	(A) 북한 군사비 / GNI	군사위협					
				(B) 능력 (북/남 군사비)× (북/남 경제비)		수준 (A×B)		지표 (index)	
1953	N/A	0.29	N/A	N/A		N/A		N/A	
1954	N/A	0.47	N/A	N/A		N/A		N/A	
1955	N/A	0.50	N/A	N/A		N/A		N/A	
1956	N/A	0.53	N/A	N/A		N/A		N/A	
1957	N/A	0.53	N/A	N/A		N/A		N/A	
1958	N/A	0.63	N/A	N/A		N/A		N/A	
1959	N/A	0.68	N/A	N/A		N/A		N/A	
1960	N/A	0.63	N/A	N/A		N/A		N/A	
1961	1.31	0.62	13.08%	0.81	0.90	10.6	11.8	34.0	42.7
1962	1.31	0.61	15.00%	0.80	0.89	12.0	13.4	38.5	48.7
1963	1.38	0.59	13.75%	0.81	0.90	11.2	12.4	36.0	45.0
1964	2.27	0.62	13.89%	1.41	1.19	19.6	16.5	63.0	59.9
1965	2.36	0.63	13.68%	1.50	1.22	20.5	16.7	65.8	60.8
1966	1.73	0.54	13.00%	0.94	0.97	12.2	12.6	39.1	45.7
1967	2.61	0.53	20.43%	1.40	1.18	28.5	24.1	91.7	87.7
1968	2.65	0.48	24.40%	1.28	1.13	31.1	27.6	100.0	100.0
1969	2.18	0.39	23.46%	0.86	0.93	20.1	21.7	64.7	78.9
1970	1.81	0.40	18.13%	0.72	0.85	13.0	15.3	41.7	55.7
1971	2.11	0.37	21.71%	0.78	0.88	16.9	19.2	54.3	69.5
1972	2.18	0.39	22.86%	0.86	0.93	19.6	21.2	62.9	76.8
1973	2.72	0.39	24.04%	1.05	1.02	25.2	24.6	80.9	89.3
1974	2.28	0.31	23.56%	0.72	0.85	16.8	19.9	54.2	72.3
1975	1.70	0.31	25.08%	0.53	0.73	13.2	18.2	42.6	66.1
1976	1.30	0.27	24.42%	0.35	0.59	8.5	14.4	27.3	52.3
1977	1.06	0.23	24.07%	0.25	0.50	5.9	12.0	19.1	43.3
1978	0.98	0.20	23.71%	0.20	0.45	4.7	10.6	15.1	38.4
1979	0.91	0.20	23.55%	0.18	0.43	4.3	10.1	13.8	36.5
1980	0.85	0.22	24.00%	0.19	0.44	4.6	10.5	14.7	38.0
1981	0.85	0.20	23.82%	0.17	0.41	4.1	9.9	13.2	35.9
1982	0.76	0.19	23.82%	0.14	0.38	3.5	9.1	11.1	32.9
1983	0.81	0.18	23.45%	0.15	0.38	3.4	9.0	11.0	32.5
1984	0.81	0.17	23.42%	0.13	0.37	3.1	8.6	10.1	31.1
1985	0.80	0.17	23.05%	0.13	0.36	3.0	8.4	9.8	30.4

연도	남북한 군사비 비교 (북/남)	남북한 경제력 비교 (북/남)	(A) 북한 군사비 / GNI	군사위협					
				(B) 능력 (북/남 군사비)× (북/남 경제비)		수준 (A×B)		지표 (index)	
1986	0.79	0.17	22.59%	0.13	0.36	3.0	8.2	9.5	29.6
1987	0.75	0.15	21.75%	0.11	0.33	2.4	7.2	7.6	26.1
1988	0.61	0.11	21.46%	0.07	0.27	1.5	5.7	4.8	20.6
1989	0.51	0.10	21.28%	0.05	0.22	1.0	4.7	3.3	17.0
1990	0.51	0.09	21.56%	0.05	0.22	1.0	4.7	3.3	17.0
1991	0.47	0.08	22.49%	0.04	0.19	0.8	4.3	2.7	15.7
1992	0.50	0.07	26.26%	0.03	0.19	0.9	4.9	2.9	17.7
1993	0.49	0.06	27.41%	0.03	0.17	0.8	4.8	2.7	17.4
1994	0.46	0.06	27.17%	0.03	0.16	0.7	4.4	0.0	15.8
1995	0.42	0.05	27.98%	0.02	0.14	0.6	4.0	1.9	14.7
1996	0.37	0.04	27.01%	0.02	0.13	0.4	3.4	1.4	12.5
1997	0.32	0.04	27.01%	0.01	0.11	0.3	3.1	1.1	11.1
1998	0.33	0.04	37.94%	0.01	0.11	0.5	4.3	1.6	15.8
1999	0.34	0.04	30.25%	0.01	0.12	0.4	3.5	1.3	12.8
2000	0.39	0.04	29.76%	0.01	0.12	0.4	3.6	1.2	12.9
2001	0.29	0.03	31.85%	0.01	0.10	0.3	3.1	1.2	11.3
2002	0.28	0.03	29.41%	0.01	0.09	0.3	2.8	1.2	10.0
2003	0.27	0.03	27.17%	0.01	0.09	0.2	2.5	1.2	9.0
2004	0.30	0.03	27.00%	0.01	0.09	0.2	2.6	1.2	9.3
2005	0.32	0.03	27.00%	0.01	0.10	0.3	2.7	1.2	9.7
2006	0.33	0.03	27.00%	0.01	0.10	0.3	2.6	1.2	9.5
2007	0.33	0.03	27.00%	0.01	0.09	0.2	2.6	1.2	9.3
2008	0.28	0.03	27.00%	0.01	0.09	0.2	2.4	1.2	8.8
2009	0.28	0.02	27.00%	0.01	0.07	0.2	1.9	1.2	6.9
2010	0.29	0.02	27.00%	0.01	0.08	0.2	2.2	1.2	8.0
2011	0.30	0.02	27.00%	0.01	0.08	0.2	2.2	1.2	8.0
2012	0.31	0.02	27.00%	0.01	0.08	0.2	2.2	1.2	8.0

주 1: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은 '북한의 군사위협 능력'과 북한의 '(군사비/국내총생산) × 100'을 곱한 값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 지표(index)'는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1968년의 값을 '100'으로 기준하여 비율에 따라 생성한 것이다.

주 2: '군사위협 능력', '군사위협 수준' 및 '군사위협 지표'에서 오른쪽의 수치는 기하평균에 따른 수치를 나타낸다.

주 3: 군사위협 능력의 수치는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년 경우).

이러한 기준 속에서 연도별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능력을 검토해 보면, 데이터가 확보된 1961년 이래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1’을 넘은 경우는 1964, 1965, 1967, 1968 그리고 1973년이 전부이다(기하평균값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하다). 이 중 가장 큰 군사위협을 보인 1965년의 경우, ‘1.50’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당해 연도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는 ‘0.63’으로 남한이 앞섰지만 북한이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2.36’의 우위를 보였으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예를 들어 1988년 북한의 위협능력은 0.1에도 못 미치는 0.07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7년부터는 0.01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65년의 ‘1.50’에 비해 150배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비록 이 수치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측정하는 정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군사위협 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기하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1965년의 ‘1.22’에서 2002년 ‘0.09’가 되었으며 이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65년에 비해 10배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군사위협의 종류를 능력과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사위협 능력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군사력을 확대하고 사용할 일상적이고 긴급한 태도가 없다면, 군사위협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4.12%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이 2%대로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력에 따라 여전히 절대 군사위협 능력은 높지만 그 수준은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27%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민총

소득 대비 군사비 지출은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을 높게 보는 기준이 되고 있다.

4. 북한 군사위협 수준의 평가와 추이

그런데 군사적으로 위협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은 군사 위협의 능력이 실제로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가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즉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은 군사 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위협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의지를 알아보는 지표는 군사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의 총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을 ‘군사위협 능력 $\times$ {(군사비/국민총생산) $\times$ 100}’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군사 부문에 대한 재정의 투여가 북한 당국의 정책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위협 수준은 기왕에 산출한 위협능력을 국민총생산 대비 군사비 투여 비율을 곱하여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군사위협 능력이 ‘1’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상당한 위협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넉넉하게 잡아 국민총생산 대비 10%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을 상당한 군사적 의지 표현으로 상정한다면,³⁹⁾ ‘10’ $(=1 \times 0.1 \times 100)$ 이상

39)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 중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59%로 5위이다. 1위는 7.99%인 사우디아라비아, 2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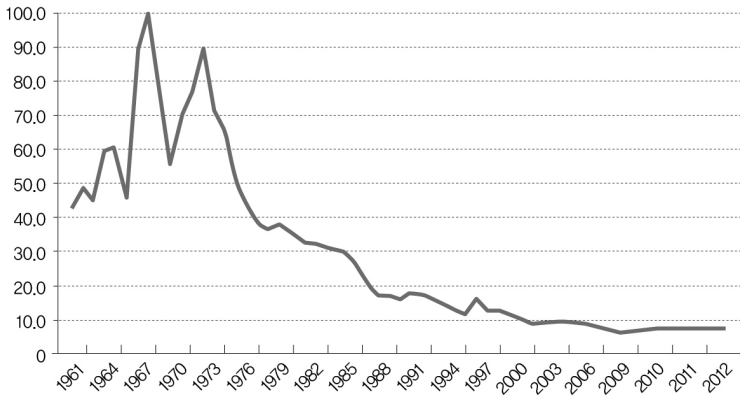
의 수치가 나타나는 경우,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⁴⁰⁾ 물론 군사비의 지출 이외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같은 군사주의 노선을 군사적 의지에 포함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의 군사적 의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의지가 국민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을 통해 수렴된다고 가정한다.

<표 2>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위협 의지는 1968년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위에서 기준으로 잡은 ‘10’을 3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같은 해 군사위협 능력이 ‘1.28’로 남한보다 앞서 있었고 또한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24.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위협 수준 역시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와 이에 따른 상대적 군사비의 차이 때문에 1976년 이래 상당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점인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1980년 후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남 위협수준은 ‘0.5’를 나타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0.2~0.4’ 사이에 머무르고 있다(기하평균값으로 보면 1968년 ‘27.6’에서 1981년 ‘9.9’로 떨어진 이후 2008년 기준 ‘2.4’의 수준이다). 위협능력이 감소한 것과 비례하여 위협 수준 또한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즉

7.85%인 이스라엘, 3위 미국(4.12%), 4위 러시아(3.06%), 5위 한국, 6위 영국(2.53%), 7위 타이완(2.21%), 8위 프랑스(1.86%), 9위 중국(1.24%), 10위 독일(1.20%) 순이다. 『노컷뉴스』, 2013년 7월 2일(<https://m.nocutnews.co.kr/news/1061769>, 검색일: 2014년 5월 2일).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는 평시에 GDP 대비 5%를 넘지 않는 군사비를 지출한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10% 이상 군사비를 지출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의 군사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0)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 116쪽.

<그림 1>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 지표 변화(기하평균값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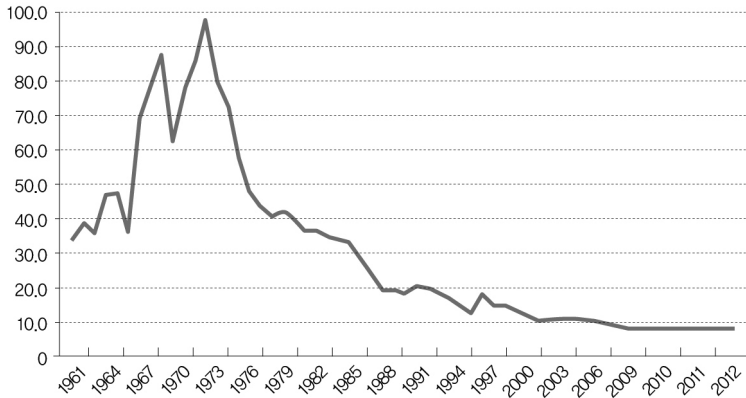


주: <표 2>의 군사위협 지표(index)를 그래프로 전환한 것이다.

경제력 약화에 따른 군사비 지출의 절대적 열세는 위협능력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능력 감소는 군사위협 의지가 강하더라도 그 위협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수준이 가장 높았던 1968년을 ‘100’으로 지표(index)화하여 비교해보면, 2008년 현재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지수는 ‘1.2’(기하평균값의 경우 ‘8.8’)에 불과하다. 이 지수를 기반으로 군사위협 수준을 연도별 그래프로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런데 여전히 평가에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된다. 북한 군사력 우위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의 군사 부문 실질구매력이 남한보다 높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 구매력의 측면에서 북한의 상대적 우위를 2배까지 올려 보아도 <그림 2>에서와 같이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의 변화 추세는 <그림 1>과 크게 다르지 않다.⁴¹⁾ (<표 3>은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을 추월한 1969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군사비를 명목군사비의 2배로 계산하여

<그림 2>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본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 지표 변화
(기하평균값 적용)



주: <표 3>의 군사위협 지표(index)를 그래프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을 다시 평가한 것이다.)

<표 3>을 통해 보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수준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20’ 이상에서 ‘50’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상당하였다. 군사위협 수준의 심각성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10.0’로 기준할 때 1973년은 ‘50.3’(기하평균값으로는 ‘34.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위협수준은 1978년 ‘10’ 이하인 ‘9.4’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6년에 ‘1’ 이하로 떨어졌고, 2008년에는 ‘0.4’(기하평균값으로는 ‘3.4’)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41) <그림>과 <표>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필자가 독자적으로 산출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능력 및 수준’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전장(戰場)에 실제 투입되는 무기·장비·인력의 질(質)을 초점으로 하는 방식과는 다른 의미를 밝힌다.

수치적으로 볼 때 위협수준이 가장 높았던 1973년에 비해 100배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기하평균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약 30배).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경제력과 군사비 지출을 통해 시기별로 또는 그 추세를 통해 분석할 때, 비록 통계의 정확도가 낮을 지라도, 그 위협능력과 수준은 어떠한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지난 1960~197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반대로 남한의 경제력이 과국적으로 저하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남북한 양국의 군사정책이 급격하게 변동하기 힘든 상황을 조건으로 한다면, 위의 방법을 통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비교에서는 사실상 남한의 우위, 북한의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토대로 분석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주장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사실 남북한의 군사비 격차만을 가지고 군사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테러집단의 군사위협은 군사비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테러집단 간에는 남북한 간의 격차보다 훨씬 큰 군사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보를 ‘일국의 내부적 가치를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때, 북한의 대남위협 능력과 수준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의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절대적 위협의 상존(常存)은 상대적 격차를 아무리 벌리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대적 위협을 빌미로 한국

<표 3> 실질구매력 기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평가

연도	남북한 군사비 비교* (북/남)	남북한 경제력 비교 (북/남)	(A) 북한 군사비 / GNI	군사위협					
				(B) 능력* (북/남 군사비)× (북/남 경제비)		수준 (A×B)		지표 (index)	
1953	N/A	0.29	N/A	N/A		N/A		N/A	
1954	N/A	0.47	N/A	N/A		N/A		N/A	
1955	N/A	0.50	N/A	N/A		N/A		N/A	
1956	N/A	0.53	N/A	N/A		N/A		N/A	
1957	N/A	0.53	N/A	N/A		N/A		N/A	
1958	N/A	0.63	N/A	N/A		N/A		N/A	
1959	N/A	0.68	N/A	N/A		N/A		N/A	
1960	N/A	0.63	N/A	N/A		N/A		N/A	
1961	1.31	0.62	13.08%	0.80	0.90	10.6	11.8	21.0	33.8
1962	1.31	0.61	15.00%	0.80	0.89	12.0	13.4	23.8	38.5
1963	1.38	0.59	13.75%	0.81	0.90	11.2	12.4	22.3	35.7
1964	2.27	0.62	13.89%	1.41	1.19	19.6	16.5	38.9	47.4
1965	2.36	0.63	13.68%	1.50	1.22	20.5	16.7	40.7	48.1
1966	1.73	0.54	13.00%	0.94	0.97	12.2	12.6	24.2	36.2
1967	2.61	0.53	20.43%	1.40	1.18	28.5	24.1	56.7	69.4
1968	2.65	0.48	24.40%	1.28	1.13	31.1	27.6	61.8	79.2
1969	4.36	0.39	23.46%	1.72	1.31	40.3	30.7	80.0	88.4
1970	3.63	0.40	18.13%	1.43	1.20	26.0	21.7	51.6	62.4
1971	4.22	0.37	21.71%	1.56	1.25	33.8	27.1	67.1	77.9
1972	4.36	0.39	22.86%	1.71	1.31	39.2	29.9	77.8	86.0
1973	5.43	0.39	24.04%	2.09	1.45	50.3	34.8	100.0	100.0
1974	4.56	0.31	23.56%	1.43	1.20	33.7	28.2	67.0	81.0
1975	3.40	0.31	25.08%	1.06	1.03	26.5	25.8	52.6	74.1
1976	2.59	0.27	24.42%	0.70	0.83	17.0	20.4	33.8	58.6
1977	2.11	0.23	24.07%	0.49	0.70	11.9	16.9	23.6	48.6
1978	1.95	0.20	23.71%	0.40	0.63	9.4	14.9	18.7	43.0
1979	1.81	0.20	23.55%	0.37	0.60	8.6	14.2	17.1	40.9
1980	1.71	0.22	24.00%	0.38	0.62	9.1	14.8	18.1	42.5
1981	1.70	0.20	23.82%	0.34	0.59	8.2	14.0	16.3	40.2
1982	1.53	0.19	23.82%	0.29	0.54	6.9	12.8	13.7	36.9
1983	1.61	0.18	23.45%	0.29	0.54	6.8	12.7	13.6	36.4

연도	남북한 군사비 비교* (북/남)	남북한 경제력 비교 (북/남)	(A) 북한 군사비 / GNI	군사위협					
				(B) 능력* (북/남 군사비)× (북/남 경제비)		수준 (A×B)		지표 (index)	
1984	1.61	0.17	23.42%	0.27	0.52	6.3	12.1	12.4	34.8
1985	1.59	0.17	23.05%	0.26	0.51	6.1	11.8	12.1	34.0
1986	1.58	0.17	22.59%	0.26	0.51	5.9	11.6	11.7	33.2
1987	1.50	0.15	21.75%	0.22	0.47	4.7	10.2	9.4	29.2
1988	1.23	0.11	21.46%	0.14	0.37	3.0	8.0	6.0	23.1
1989	1.02	0.10	21.28%	0.10	0.31	2.1	6.6	4.1	19.1
1990	1.03	0.09	21.56%	0.09	0.31	2.0	6.6	4.0	19.0
1991	0.95	0.08	22.49%	0.07	0.27	1.7	6.1	3.3	17.6
1992	1.00	0.07	26.26%	0.07	0.26	1.8	6.9	3.6	19.9
1993	0.99	0.06	27.41%	0.06	0.25	1.7	6.8	3.3	19.5
1994	0.91	0.06	27.17%	0.05	0.23	1.4	6.2	2.8	17.7
1995	0.85	0.05	27.98%	0.04	0.20	1.2	5.7	2.3	16.4
1996	0.73	0.04	27.01%	0.03	0.18	0.9	4.9	1.7	14.0
1997	0.63	0.04	27.01%	0.03	0.16	0.7	4.3	1.4	12.4
1998	0.65	0.04	37.94%	0.03	0.16	1.0	6.1	2.0	17.6
1999	0.69	0.04	30.25%	0.03	0.16	0.8	5.0	1.6	14.3
2000	0.78	0.04	29.76%	0.03	0.17	0.9	5.0	1.7	14.5
2001	0.58	0.03	31.85%	0.02	0.14	0.6	4.4	1.2	12.6
2002	0.57	0.03	29.41%	0.02	0.13	0.5	3.9	1.0	11.2
2003	0.55	0.03	27.17%	0.02	0.13	0.5	3.5	0.9	10.1
2004	0.59	0.03	27.00%	0.02	0.13	0.5	3.6	1.0	10.4
2005	0.64	0.03	27.00%	0.02	0.14	0.5	3.8	1.0	10.8
2006	0.65	0.03	27.00%	0.02	0.14	0.5	3.7	1.0	10.6
2007	0.65	0.03	27.00%	0.02	0.13	0.5	3.6	1.0	10.4
2008	0.56	0.03	27.00%	0.02	0.13	0.4	3.4	0.9	9.9
2009	0.56	0.02	27.00%	0.01	0.12	0.3	3.2	0.8	9.2
2010	0.58	0.02	27.00%	0.01	0.12	0.3	3.2	0.8	9.2
2011	0.60	0.02	27.00%	0.01	0.12	0.3	3.2	0.8	9.2
2012	0.62	0.02	27.00%	0.01	0.12	0.3	3.2	0.8	9.2

주: ‘남북한 군사비 비교’는 남한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한 1969년 이후 북한 군사비(<표 2>의 수치)에 2배를 곱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 지표(index)’는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1973년의 값을 ‘100’으로 기준하여 비율에 따라 생성한 지표이다.

정부 또는 군부가 비합리적 군사력 증강에 정책초점을 둘 경우,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군사력에 치중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제언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5. 결론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위협을 군사비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남침 준비에 대한 피해의식을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열세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물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력은 말 그대로 ‘비대칭적’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허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협력과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전략적’ 무기일 뿐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현재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안보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안보강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국의 안보정책은 2009년 이후 ‘G2’로 표현되는 미·중간 전략적 관계가 현실화되면서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전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균형, 또는 이미 일부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중국의 거센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전략적 기치로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게 군사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안보확실성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통일정책의 추구에서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안보긴장의 고도화 속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안보를 위해 쏟은 노력은 상대와의 갈등을 유발시켜 오히려 안보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안보 딜레마이다.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재차 요구했다. 이는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한 것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순수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적의 군사위협에 대해 가용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비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적극적 대비책인데,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0년 이전에 도입할 계획인 ‘킬 체인(Kill Chain)’은 대북 선제공격(또는 예방전쟁)의 수단인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킬 체인의 사슬을 끊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 비용은 우리의 그것보다 매우 낮을 것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인 KAMD(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theater)에서 현재의 낮은 요격률을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이 낮다. 특히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파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 피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두 안보대응책 모두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좀 더 ‘손쉽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이 예상된다. 안보 위기는 지속될 것이므로, 그 이후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우리의 대응책은 억제에 기여하기보다는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또한 안보 불안 가중시키는 기제가 될 공산이 크다. 즉 남북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균열이 서로가 군사적 우위에 서려는 노력 속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전환되면서 서로에 대한 살상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스스로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이 불박이 미군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안보확실성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희생(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세계전략 수립의 차질)’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비대칭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MD체제 동참, 한국군 해외파견, 최첨단 미국무기의 수입증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등과 같은 이슈에서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안보확실성 추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대응하여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보 딜레마의 긴장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현 단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관계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는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하고 대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에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개발·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는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확장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 구상을 위해서는 군사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 하는 적절한 방향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 개편과 무기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MD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안보적 갈등구조에 놓이게 됨으로써 최대교역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제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북한과의 소모적인 재래식 군사력 경쟁을 비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 접수: 7월 4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8월 4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국방부, 『IMF시대의 국가안보와 국방비』(서울: 국방부, 1998).
- _____, 『국방백서 1991~1992』(서울: 국방부, 1992).
- _____, 『국방백서 1998』(서울: 국방부, 1998).
-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아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서울: 오름, 2006).
-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 『코리안 엔드게임』, 이홍동 옮김(서울: 삼인, 2003).
- 이은국,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분석론』(서울: 대영문화사,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1998~1997).
-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2) 논문

- 이정우,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미동맹의 효용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 _____,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 _____,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JPI 정책포럼』, 2013-18(2013), <http://www.jpi.or.kr/contents/?mid=KR1710> (검색일: 2014년 5월 27일).
-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 _____, “남북한의 군사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제1호(1997).
- 함택영·서재정,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북한군사문제의 재

조명』(파주: 한울, 2006).

3) 신문

『노컷뉴스』, 2013년 7월 2일(<https://m.nocutnews.co.kr/news/1061769>, 검색일: 2014년 5월 2일).

『동아일보』, 2013년 11월 6일.

『미국의 소리』,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941917.html> (검색일: 2014년 6월 23일).

『신동아』, 3월호(2010, 통권 606호).

『한겨레』, 2013년 11월 7일.

4) 기타 자료

국방부, 『1967 국방백서』.

_____, 『1991~1992 국방백서』.

_____, 『2004 국방백서』.

_____, 『2008 국방백서』.

_____, 『2012 국방백서』.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2).

한국은행,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14년 6월 28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Washington D.C.: GPO, 1988).

2) 논문

Beldecos, Nick and Eric Heginbotham,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Korea,” *Breakthrough*(Spring 1995).

O’Hanlon, Micheal,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Spring 1998).

Posen, Barry R., “Measuring the European Conventional Bala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1984/85).

3) 기타 자료

Military Balance 각 연도.

SIPRI Yearbook 2003.

SIPRI Yearbook 2013.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the Change of Its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Lee, Jeongwoo(IFES of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is standing for a critical review against North Korean superiority in conventional military power relatively to South Korea, even South Korea's economic capability is 43 times as bigger as North Korea's and South Korea has spent 3 times as much as North Korea's in military expenditure in current years. A nation's security plan might be distorted when there is no precise evaluations about an opponent's military power and its military threat level, therefore, this paper has analyzed that ① evaluation of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② relative evaluation with South Korea's military power, and ③ changes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Korean War.

So-called security dilemma of South-North Korea has continued

according to overestimating each other's military power and distrusting each other's intentions through over a half century. In this aspect, it is no doubt that it is important to measure North Korea's military power and changes of military threats precisely because if there is not fully sympathized that South Korea's superiority in military power internally in South Korea.

Keywords: North Korea's Military power,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military expendi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